

‘尹표 규제혁신회의’ 신설에 군사문화산업 규제혁파 기대감

정부, 회의 신설로 규제 완화 긍정적 과도한 법적 해석으로 사업 접기도 대만, 규제 풀어 경제·군사 실익

윤석열 정부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발표했다. 군사 및 경제적 효용성이 높지만 과도한 규제로 존재의 기로에 놓인 국내 군사문화산업계는 이번 발표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예를 들어, 모의전투경기(Mil-Sim·밀심)에 사용되는 6mm(플라스틱) ‘에어소프트건’과 방호장구 및 피복시장은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시장이다. 이 같은 분야의 규제가 완화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소프트건으로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만기업들

대만(중화민국)에는 크고 작은 ‘군사문화산업’ 관련 업체들이 수 조원의 연매출을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만 육군총장·해병대사령관비 밀심경기를 후원하는 G&G사의 연평균 매출은 1조 원이 넘는다. G&G사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동 에어소프트건의 원조국인 일본과 한국, 저가물량공세를



왼쪽부터 군용품 레플리카 회사인 대만의 J-TECH사가 만든 방탄복 외피와 카메라에 장착이 가능한 오픈 사이트형의 조준경. 한국이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사이 대만기업들은 군사문화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일본 라쿠텐

펼치는 중국을 제치고 관련시장에서 선두로 자리잡았다. 이 회사는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생산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식당 등 시가지지를 완벽히 재현한 실내 밀심경기장 사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 J-TECH사는 주일 미해병대에 장구류 상당 부분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유사군복으로 분류되는 밀리터리

레플리카를 만들던 영세업체였지만, 이후 옥션이나 라쿠텐 등 일본 온라인샵에서 이 회사 제품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대만 기업들이 ‘군사문화산업’에서 큰 성과를 내게된 원동력은 규제혁신을 넘은 적극적 장려정책 덕분이었다. 국내에는 일본에 이어 1994년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로 6mm플라스틱 비비탄

을 연속으로 발사케하는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아카데미사가 있지만, 현재는 아동용 장난감총을 만드는 정도에 멈춰있다. 국군의 제식 총기들을 비사격전술훈련 등에 사용할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 토이스타사도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국내업체인 DAS사는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규제로 인해 사세를 확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발사반동과 실총과 유사한 동작들이 가능해 군부대에서 훈련용 총기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로 놓쳐버린 경제와 군사적 실익

대만이나 일본은 에어소프트건의 발사위력의 허용 기준은 ‘3~1J(줄)’ 정도다. 반면, 국내 허용 기준은 ‘0.2J’ 이하다. ‘군사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아졌다. 전북 소재의 에어소프트건 유통업체는 무선조종 비행기와 드론 등에도 쓰이는 전동 에어소프트건 배터리를 수입했는데, 과도한 법적 해석으로 사업을 접어야하는

위기에 처해졌다.

에어소프트건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완구용 광학장비도 규제대상이다. 상상력과 없고, 실총의 반동을 견딜 정도의 내구성도 없는 완구임에도 경찰은 에어소프트건과 함께 ‘모의총기’로 분류해 동호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육군의 한 간부는 올해 초 부하들에게 ‘워리어플랫폼’의 개념과 비사격 전술 행동 등을 가르치기 위해 조준점 조절이 불가능한 더미 조준경을 구매했다가 장비를 압류당했다. 울산지방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요하면서 군사경찰이 조치를 하게된 것이다.

지난 2일 YTN은 대만 북부 신베이에 위치한 에어소프트건 자격장을 소개했다. 자격장 방문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이러한 자격장 방문인원은 3~4배 늘어났다. 앞서 2008년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밀심 동호인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돌봄 등 가사근로자도 ‘휴일·연차’ 보장

오늘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적용

청소·돌봄 등을 하는 가사근로자도 16일부터 4대 보험 가입,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 시행대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고용노동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 없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들은 68년 만에 노동권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들도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긴다. 또,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일 경우 15일 유급연차를 쓸 수 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으로 당분간 인건비

등 노동 비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정부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인증 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가량 걸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교육부,尹 주문에 ‘반도체 특별팀’ 가동

尹대통령, 반도체 인재양성 지시 특별팀장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인재양성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팀을 가동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이 팀장을 맡았다. 교육부장관이 공식인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 역할을 하는 차관이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시를 직접 진두지휘하게 된 셈이다.

특별팀에는 교육부 외에도 기획재정



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 등 기업계 전문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형태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리콘마이터스, 미코세라믹스, AP시스템 등 반도체 기업 인사담당자도 참석했다.

특별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과제를 발굴·협의하고,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한승수 기자 hys@

“반도체 가르칠 교수 없다” 포럼서 쓴소리

교육부, 반도체산업 주제 공개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양성을 지시하고, 교육부 등이 유관 정부부처와 첨단 산업분야 인재양성에 나선다고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작 학생들이 가르칠 교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연구지원 등 예산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학계 전문가, 기업 임원 및 반도체 전공 학생 등을 초청하여 ‘반도체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를 주제로 15일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국·과장 등 교육부 간부진이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했으며, 교육부 전체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황철성 교수(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600여 편 이상의 반도체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반도체 분야 석학이다.

황 교수는 “대학은 기업이 연구하지 않는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은 양산 가능한 기술을 픽업한다”며 “교수들이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하지만 교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토론회에서도 황 교수가 언급한 반도체 교수 인력 부족 문제에 동의하며 입을 모았다. /신하은 기자

조희연 교육감, ‘제3기 출범준비위’ 가동

(서울시)

위원장에 반상진 전북대 교수 위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 ‘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출범준비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하여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교육회복 증진 ▲KB 수업평가 혁신 ▲미래교육 ▲혁신교육 다양화 ▲통합적 교육 복지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

지원시스템 추진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시민과 협치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